

美 USTR 301조 카드 꺼냈다... 韓 디지털 규제에 통상 압박

〈무역대표부〉

망 사용료·온플랫폼 '비관세 장벽' 지목
국회입법 본격화에 美 압박수위 상승
플랫폼 지배력 규제, 최대쟁점 부상
디지털 통상 갈등 재점화 등 우려



미국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무역법 122조와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어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미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통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고정밀 지도 반출 등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한미 간 통상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3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국 기업이나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단독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절차와 무관하게 행정부 재량으로 발동할 수 있어,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USTR는 매년 발간하는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 문제와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을 대

표적인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왔다.

지난 1월에도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디지털 관련 입법·법적 조치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해당 서한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망 사용료 문제를 '네트워크 사용료'라는 명칭으로 직접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망 이용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해당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계기로 논의가 재점화됐으나, 미국은 이를 명백한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며 통상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넷

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계 글로벌 CP들은 망 사용료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와 함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처리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금지 조항이 적용될 경우 구글·애플의 검색 상단 노출 구조나 유튜브 뮤직 결합 판매 등 이른바 '록인(Lock-in)' 전략이 제약될 수 있다.

여기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까지 더해질 경우 수수료 기반 수익 구조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돼, 플랫폼 지배력을 흔들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미국 빅테크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과 애플이 정부에 요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또한 현재 최종 결정을 앞둔 만큼 이번 사태의 영향권 안에 있다. 구글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정부 조건 일부를 수용한 보안서류를 제출했고, 애플 또한 서류 보안을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결정 시한을 올해로 연장한 상태다. 다만 서류 검토에 시간

이 필요한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안에 따라 미국의 공세 강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온플법의 경우 최근의 쿠광 사태로 크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상당히 큰 압박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망 사용료의 경우 이미 미국 테크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부분인 만큼 국내의 기업역차별을 두고 USTR가 압박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정성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는 "슈퍼 301조의 경우 한국 기업에는 우호적이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는 불리한 규제를 중심으로 다루는데, 디지털 관련한 부분에서는 온플법이 가장 큰 사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디지털자산 기본법’ 막바지 지분제한·은행주도안 쟁점

금융당국, 5대거래소 비공개 간담회
민주당 기본법 최종안 검토 착수
내달 입법 절차 본격화 전망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현실화를 위한 막판 논의가 활발하다. 금융당국은 정부안 마련에 앞서 5대 거래소가 참여하는 비공개 업계 간담회를 가졌고, 여당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한 최종 검토에 돌입한다. 이르면 다음달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권 컨소시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23일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거래소의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 외국인 거래 및 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 규제 완화 방안 등 업계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에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최종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법조계·디지털자산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다. 이어 26일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의 필요성 및 시장 여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입법 논의를 서두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당안과 정부안 이어느 정도 일치점을 이룬다면 이르면 오는 3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본격적인 입법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주요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거래소의 지분 제한'은 개별 대주주의 최대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와 은행 지주사의 지분 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지배구조를 분산한다는 의도다.

'은행 컨소시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개 혹은 복수의 은행이 포함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가치와 연동된 만큼, 높은 내부통제 수준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은행이 발행을 책임지도록 한다는 목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내투자증권 퇴직연금 결과로 증명합니다

2025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 출처: 고용노동부 '25.11월 |

2025
퇴직연금 증권업
우수사업자

| 출처: 고용노동부 '25.11월 |

2024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 출처: 고용노동부 '24.10월 |

이제, 연금도 투자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

[투자유치형] ※가입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필독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고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연금인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소득세(16.5%) 부과 ※DC 퇴직금재원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는 적립금 평잔 구간별 상이하게 부과되며, 가입자 회사에 납입. 단, 가입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별 보수 발생 ※IRP-N2 적립금 평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0.08%~0.15%)와 자산 관리수수료(0.07%~0.10%)가 발생하며 연 후취, 적립금 평잔 구간별 상이. 단, 가입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별 보수 발생. 자세한 수수료율은 홈페이지 참고(적립금 평잔*연간 일차별 평가금액의 평균값, 퇴직금 이전분에 한함) ※IRP-N2 디이벡트)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단, 가입하는 금융투자상품별 보수 발생 ※IRP-N2)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단, 가입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별 보수 발생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5453호(2025-12-31 ~ 2026-12-31)

NH투자증권